

# 野 선거 참패 후유증... 기약 없는 원구성

한국당·바른미래 비대위 체제 평화당 조기 전대 논의에 공전 국회부의장·상임위 배분 경찰청장 청문회 등 현안 산적



평화당 고문단 회동 민주당 조배숙 대표(오른쪽)가 19일 낮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고문단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양수 고문, 권노갑, 정대철 상임고문, 홍기훈 고문. /연합뉴스

야권이 6·13 지방선거 참패의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이 기약없이 늦춰지고 있다. 당장, 6월 임시국회도 분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회기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 원 구성은 물론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내용을 수습하기 전까지 원 구성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오는 25일이나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할 예정이며, 민주평화당도 선거 패배를 놓고 조기 전대 개최를 논의하고 있어 국회 공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의 마지막노선을 다음 달 17일 제헌절로 보는 분위기다. 아무리 늦어도 그때까지는 국회를 완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선출 절차가 기약없이 지연될 경우 최다선인 한국당 서청원(8선) 의원의 의장을 대신해 70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발표하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는 차원에서 국회가 조속히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과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흑시 있을지 모를 개각 시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치

려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국회 원 구성이 이뤄져야 해결될 사안들이다. 일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달 말까지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치고 7월이나 의정단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원 구성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해도 극심한 진통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총 3명인데 이 자리를 나눠야 하는 교섭단체는 4곳이기 때문이다. 또 국회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

장을 두고도 여야의 양보없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개회는 사실상 물 건너 갔으며 제헌절 전까지라도 원 구성을 마치면 다행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야당 몫 국회부의장 자리를 두고도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힘 겨루기도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바른미래당은 내부적으로 주승용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밀고 있는 분위기지만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평화당은 국회 부의장 자리를 상임위 배분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기류다. 국회부의장 협상을 잘 한

다면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 자리를 하나 더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광주·전남 의원들 사이에 물 밑 합의가 이뤄지면서 주승용 국회부의장 카드가 극적으로 관철되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평화당 관계자는 "분당 과정에서 감정의 앙금이 쌓이긴 했지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면서 "주 의원이 원만한 성격인데다 지역 출신 인사가 국회부의장이 되어 한다는 공감대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한·미훈련 중단 존중"

민주 "긴장완화 조치"... 한국당 "핵 폐기 실질 성과내야"

여야는 19일 한미 군당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표는 서면 브리핑에서 "UFG 일시 중단을 깊이 존중한다"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로, 적절한 시점에 나온 적절한 발표"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이어질 남북·북미 간 후속 회담과 그 이행 과정에서 상호 신뢰가 돈독해지고 한반도 평화정착이 공고해지도록 여러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표인은 "한미 군당국의 공조하에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결정으로 이해한다"며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성과가 있기

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북미 회담의 시작점이기"를 바란다"며 "자유국방의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장기적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며 "이로써 한미동맹이 약화·퇴색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내디딘 평화의 발걸음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북한에서도 상응할 만한 평화적 행보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

## 한국당, 김성태 혁신안 '시끌'

초선모임 '절차 유감'... 정우택 '독단행동 황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내놓은 혁신안을 놓고 당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 대표는 혁신안을 밀어붙일 기세지만 당 소속 의원과 주변세력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19일 당내의 '독단'이란 비판에 대해 "쇄신안을 발표하기 전에 처음부터 논의에 부쳤다면 지금의 어떤 내용인 발표조차 못 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하지만 몸부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반발에도 혁신 작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반발은 이날도 계속됐다. 정우택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대단히 황당한 행동이다. 이런 독단적 행동은 공당이 아닌 사당의 행태로 본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초선 의원들도 이날 모임을 갖고 김 대표 행 쇄신안 관련,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이른바 '김성태 혁신안'의 내용보다는 절차에 대해 문제를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 좌장격인 김성원 의원은 "거의 모든 초선 의원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 與, 국회 남북특위 추진... 남북경협 '시동'

남북 인프라 연결 간담회... "핵심은 교통...철도 주권 확보해야"

여당이 남북경협 지원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 나서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각종 제도적 지원을 위해 국회 내 남북관계특별위원회(남북특위)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교통 인프라 연결' 조찬 간담회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대표되는 남북경협의 핵심은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와 가스관 정도는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남북특위는 입법권은 물론이고 여러 부처가 얽힌 예산 문제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의원 모임인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조성을 위해 필요한 여건과 아울러 향후 추진 방

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홍 원내대표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 당 주요 인사는 물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축사에서 "남북 경협이 탄력을 받으려면 북한 교통인프라의 개발과 남북한 연결이 핵심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을 통해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기반을 조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지

낸 조성식 의원은 "철도 입찰시장 측면에서 보면 유럽은 100, 한국은 80, 중국은 60 수준으로, 경쟁이 쉽지가 않다"며 "남북 SOC(사회간접자본) 협력사업과 북방진출을 하는 데 있어 북한과의 사전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철도사업 협력이 진행될 경우 남북이 반드시 사업자분의 51%를 갖도록 하는 등 향후 기술·운영 문제에 있어 '철도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향후 남북 철도 연결과 열차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공동조사단을 통한 실사가 필요하다"며 "북측의 이해나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남북 간 철도 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 바른미래 '반쪽 워크숍'

안철수 미국행·유승민 불참... 정제성 고민

바른미래당이 19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양평 용문산 야영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나 당의 중추인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는 물론 유승민 전 공동대표마저 참석하지 않아 '반쪽 워크숍'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창당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6·13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당의 '화학적 결합'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당의 정강·정책에서부터 '중도개혁 대 개혁보수' 등 그간 이견이 불거졌던 모든 문제를 꺼내놓고

당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크숍에는 당 소속 의원 30명 중 유승민 전 공동대표와 지상욱 전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과 정치활동을 같이 하는 '비례대표 3인방'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합당 후 '나홀로 행보'를 이어온 박선숙 의원을 제외한 24명이 참석한다. 한 재선 의원은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빠진 채 당의 노선에 대해 논의하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첫날 워크숍에서는 안 전 후보의 정계은퇴론이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